

'92 임금인상안

임금 정책속에 내재된 자본의 이해

정부, 경총, 전노협, 노총의 임금인상안 비교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임금안정 정책과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노동운동전선의 대립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총선과 맞물려 임금인상투쟁도 어느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련의 글을 통해 각 단체의 임금인상안과 정부의 정책 검토를 통해 올해 임무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편집자 주)

92년도 임무를 맞이해 정부와 자본가 단체들은 일제히 강력한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91년12월 발표한 92년도 경제운용방안에서 "물가인상 억제와 국제수지 적자 방지를 위해서 92년도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도 산출방식을 약간 구체화 한 것 이외에 정부는 자본가 단체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수준이 주요경쟁상대국보다 높다는 논리,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세계최하의 노동시간, 최악의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1. 정부의 임금억제 주장

전노협 등 노동자 진영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러한 임금억제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물가폭등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

생활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확보를 목표로 임금인상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침을 통해서 국영기업, 정부투자(출연)기관, 그리고 5백인 이상 사업장, 3백인 이상 서비스업체 등을 임금억제 선도업체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

(표1) 연도별 'GNP 대비 임금'의 국제비교(1980-1990)

연도	월임금/1인당 GNP			
	한국	일본	미국	대만
1980	15.17	11.81	10.45	9.52
1981	14.92	11.86	10.41	9.70
1982	15.16	11.81	10.53	10.09
1983	14.60	11.79	10.60	9.84
1984	14.10	11.67	10.18	9.72
1985	14.13	11.09	10.00	9.67
1986	13.34	10.95	9.78	9.26
1987	12.85	10.85	9.53	9.15
1988	13.02	10.44	9.18	9.42
1989	14.66	9.99	8.92	9.95
1990	14.99	10.10	8.83	10.40

월임금은 한국노동연구원, '1992년 KLI 노동통계, 1992. 2. 1인당 GNP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2. 1

의 임금인상을 5%내로 억제하도록 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정부가 5%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왜 해평이면 5%인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허위사

실을 근거로 임금억제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등의 통제조치를 동원한 허위사실 유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먼저 정부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크게 높다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GNP 대비 임금수준'을 살펴보자.

노동부는 최근 고용의 임금인상으로 1인당 GNP대비 임금수준이 주요 경쟁상대국인 대만 등은 물론 일본, 미국 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낮춰 추계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기도 하다.

2. 경총의 임금조정 지침

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의 임금인상안도 정부와 그 뿌리는 같다.

그러나 경총의 '92 임금조정 지침'에는 그 뿌리를 그럴 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갖은 치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의 임금조정 지침은 모든 얼굴에 칠해진 짙은 화장처럼 자신의 추한 꼴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다.

먼저 경총은 갖가지 통계를 동원해 지난 몇년간 생산성을 넘는 고용의 임금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7%라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경총은 임금인상율을 산출하는 데 이른바 '경쟁력 조정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92년도부터 새롭게 사용하고 있다. '경쟁력 상실률'이란 지난 4년간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그 경쟁력 상실치는 지난 4년간 임금인상률 72.3%에서 국가민생안정 증가율을 누적치인 50.3%를 빼준 값인 22.0%라는 것이다. 이를 이후 3년 동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임금인상률에

(표2) 연도별 명목임금,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지수와 증가율 (전산업, 단위%)

연도	명목임금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85	100.0	9.2	100.0	6.6	100.0	7.0
1986	108.2	8.2	105.3	5.3	116.3	16.3
1987	119.2	10.1	112.6	6.9	132.3	13.8
1988	137.6	15.5	121.4	7.8	150.6	13.8
1989	166.7	21.1	139.0	14.5	168.5	11.9
1990	198.1	18.8	152.1	9.4	193.9	15.1
1991상	213.6	16.9	152.5	6.3	214.3	15.5

자료: 노동부, '매일노동통계조사보고서'

정부 5%인상안 노동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임금인상=고물가' 도식 철회와 올바른 경제정책 절실

그러나 다음 표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1인당 GNP 대비 임금'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약점을 펼친 시기인 80년, 81년도에 대만, 일본, 미국 등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1인당GNP 대비 임금'은 각국의 임금수준이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지표로서는 전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1참고) 최근에는 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골이여 최근 몇년간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누적인 경쟁력 상실분을 보전하고 향후 3년에 걸쳐 경쟁력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책정했다.

경쟁력 상실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차기년도 임금인상률에서 7.3%(누적인 경쟁력 상실률 22.0%/3=7.3%)를 차감하여 적정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정임금인상률 = 실질 GDP 성장률(7%) + 물가상승률(GDP인플레이터 증가율8%) - 취업자 증가율(2%) - 경쟁력 조정지(7.3%) =

서 한해에 7.3%씩을 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지난 4년간이고, 향후 3년간 일까?

경쟁력 조정지를 3년간으로 나누어 그 한해분을 여기에서 빼준 것은 다른데 아니라 정부의 5% 내 임금억제정책에 호응하고자 5%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기 위해서 적절할 수치를 뽑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산출공식을 보고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에게 감지 덕지 해야 할 판이다. '지나친' 임금인상으로 생긴 경쟁력 상실분 22%를 기업주들이 향후 3년이 아니라

92년도에 한해만에 회복하려고 하면 올해의 적정임금인상률은 '실질GDP성장률(7%) + 물가상승률(GDP인플레이터 증가율8%) - 취업자 증가율(2%) - 경쟁력 조정지(22.0%) = -9.0%(!)', 즉 임금을 9%나 삭감해야 되었을 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노동자들은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른바 '생산성 임금론'을 반대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활이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된 후에 생산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경총의 주장은 설득력

(표2) 연도별 명목임금,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지수와 증가율 (전산업, 단위%)

연도	명목임금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85	100.0	9.2	100.0	6.6	100.0	7.0
1986	108.2	8.2	105.3	5.3	116.3	16.3
1987	119.2	10.1	112.6	6.9	132.3	13.8
1988	137.6	15.5	121.4	7.8	150.6	13.8
1989	166.7	21.1	139.0	14.5	168.5	11.9
1990	198.1	18.8	152.1	9.4	193.9	15.1
1991상	213.6	16.9	152.5	6.3	214.3	15.5

자료: 노동부, '매일노동통계조사보고서'

글심는 순서

1. 정부, 경총, 전노협, 노총의 임금 인상안 비교
2. 정부의 임금안정 정책
3. 앞으로의 임무 전망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곧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생계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 즉 임금은 바로 이 생계비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계비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원가이다.

임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자기와 파는 노동력의 원가 만큼도 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신식기업주가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다면 그회사는 며칠 가지 못해서 망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임금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정상적인 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존속과 사회의 유지, 발전까지도 위협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원리를 보더라도 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만큼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노동력의 제값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최소한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해야 하므로, 최저생계비 철폐가 노동자의 기본적이고도 일차적인 요구가 된다.

91년 10월에 실시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평균 부양가족수는 2.9인이며, 이의 최저생계비는 88만2,502원이다. 또한 조합원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합한 금액은 63만3,104원인데 이 차액은 24만9,393원이다.

원래 임금인상요구액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현재의 기본급

C
C×0.573(B중 기본급 비중=57.3%)=92,335-임금인상요구액

전노협이 91년 10월 실시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 전노협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92년 임금인상요구 평균은 25.8%(기본급으로 9만3,604원)이었다. 한편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기준 15%를 92년 임금인상요구로 제시했다. 노총도 처음에는 생계비를 근거로 해 24.3%의 임금인상요구 초안을 만들었으나 산별위원장 정책세미나에서 이 초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요구율을 수정했다.

참고로 전노협과 노총의 92년 도 최저생계비를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전노협과 노총의 최저생계비는 각 가구당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26.5%-29.8%로 잡고 있다.

(표3참고) 이상에서 우리는 정부와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92년도 임금인상요구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실제로대로 올해 정부와 자본가 단체들은 강력한 임금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임금억제 정책을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가액은 19.1%이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뺀다하더라도 내년도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은 16.2%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표3) 전노협과 노총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전 노 협			노 총		
	생선비합계		생계비 생산량	생선비합계		생계비 생산량
	90년	91년		90년	91년	
단신남자	356,054	450,310	26.5	337,739	425,836	26.1
단신여자	335,979	424,950	26.5	332,190	426,722	28.5
2인가구	586,194	761,077	29.8	529,042	683,814	29.3
3인가구	693,901	895,994	29.1	670,251	862,100	28.6
4인가구	909,238	1,162,620	27.9	875,464	1,113,862	27.2
5인가구				1,141,781	1,459,106	27.8

통상임금이 워낙 최저생계비에 못미치기 때문에 전노협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노협은 92년 임금인상률 요구액이 있어 현실적인 관철가능성과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계비의 90%정취를 목표로 했다.

92년도 임금인상요구액 산출과정을 도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2.9인 최저생계비 882,502×0.9(생계비의 90%)=794,252
-A
A-(통상임금+상여금)월할
금=633,109-B=161,143-

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금억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폭등 등 경제적 실정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물가 및 경제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본가들도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므로써 이익을 보장받던 구습을 버리고 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토지를 매각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주 진 우

(전노협 조사통계국)

判別風

거짓바람 몰아낼 아래로부터의 바람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않았다. 때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지는 이합집산의 단체들. 모두가 바람타고 '바람잡이'가 되겠다고 아우성이다.

우리사회에는 '바람'이 너무나 많다. 봄바람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치맛바람, 투기바람, 수입바람 등등 여기다가 요즘은 철따라 부는 선거바람까지 합세한다.

바람이아기를 하자면, 풀이없다.

이승우화에 보면 '바람과 태양의 내기'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지나가는 행인 외투를 벗겨서 하지만 행인은 오히려 더 단단히 외투를 잡고 놓지 않는다. 그로 태양은 뜨거운 햇살로 행인 스스로가 더위에 지쳐 외투를 벗게한다는 이 우화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선거바람의 허구와 연계해 보는 것이 어리석은 일만은 아닐것이다.

선량함기가 아니라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뒷거래의 술수만 난무하는 1992년의 선거. 누가 어떤말을 해도 당당한 수순으로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정치꾼들의 자만속에서 모두가 바람을 찾는다. 억지바람을 불게해서 내기에 승리하고 큰 욕심으로 도대체 어디서 부는 바람인지도 모르는채 그것을 차자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인다.

여당은 여당대로 지지세전개 보였던 '보수바람'을 동경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난 총선에 불었던 '황새바람'을 잊지 못한다. 모든 바람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에게 나온 바람으로 착각한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라고 믿

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될까. 타락해가는 정치판과 거짓바람, 흑색바람만 넘치는 이곳에 '봄바람'은 발을 붙이지 못한다.

작은 우화에 얽매 버리는 작은이야기 가 우리를 우물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까. 우리가 그 작은 이야기에서든 깨우치지 못하는 답답한 그것 때문일까.

부총리가 전국구의원 공천에서 제외되는(지역구 출마로 '당신'이 충분한 인물) 여당의 비도덕적인 정치인의 '새바람과 새인물'을 부르짖는 국민당의 잡탕식 공천, 금권선거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돈 없으면 선거 못한다"식의 자기합리화 행태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모두가 바람을 가지겠다고 아우성인

그러나 바람의 영역이 비단 정당의 부추기는 억지바람이 전부 아니다. 역사 이래로 진정한 바람은 아래로부터의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힘껏 불어댄다고 불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부는 그런 바람이다. 가을에 부는 산들 바람도 아니요 정치꾼들이 들고 흔드는 것대의 바람도 아니다. 봄의와 의를 극복하는 아래사람들의 물결이 터지는 차갑고 불같은 바람이 바로 바람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바람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아침의 바람은 너무나 차게 위에서 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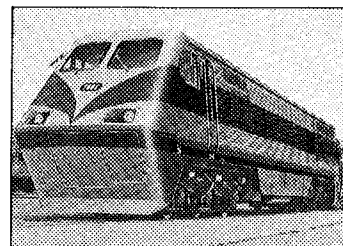
(참조)

기술로 경쟁 품질로 수출

현대정공은 끝없는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운송기계산업

전동차, 새마을 열차, 시속 300km의 고속 전철 개발 등 각종 철도차량 및 다목적 중형 열기 생산으로 최첨단 운송기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정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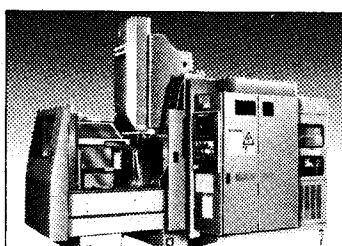
차량산업

안전도와 성능에서 앞서는 현대정공 경호로 - 이제 보다 쾌적하고 성능 좋은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산업

고정밀, 고강도, 초고속 산업기계 생산 및 수출로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현대정공. 첨단 인공지능 로봇 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공작기계 생산과 함께 무인자동화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술로 경쟁
품질로 수출

종합기계 메이커
現代精工